

일본 중앙지 사설을 통해 본 한일관계 (2019.1~11)

고바야시 소메이 (니혼 대학 법학부 신문학과 부교수)

본고는 일본의 중앙 일간지 사설에 나타난 입장과 논조의 유사·차이점을 분석하여 일본 사회에서 퍼지는 “공기”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간의 ‘온도차’는 있지만 모든 중앙 일간지가 징용공 문제를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본 사회에는 징용공 문제를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한다는 전제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토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징용공 문제는 통상 문제와 안보 문제에서 명확하게 분리하고 ‘역사’와 ‘법’을 모두 충족하는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목 차

들어가며

1. “역사”와 “법”의 교착점에 위치한 징용공 문제: 2019년 1~3월

-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신년 기자회견
- 문재인 대통령의 삼일절 연설

2. “역사”와 “법”에서 통상 문제로의 “전선” 확대: 2019년 4~7월

- 반도체 재료 수출 엄격화
- “화이트 국가”제외

3. 링크지되는 통상과 안보, 그리고 “과거”: 2019년 8월

- 문 대통령에 의한 광복절 연설
- GSOMIA 파기

4. 징용공 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통상 문제로의 대처: 2019년 9월~11월

- GSOMIA 파기 철회

나가며

들어가며

- 일본의 중앙 일간지는 어떻게 한일 관계의 현안 사항에 대해 보도, 논평을 내고 있었는지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산케이, 닛케이 각지에 게재 한 사설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 본고는 각 일간지의 입장과 논조의 유사·차이점을 부각시켜 한국을 둘러싼 담론의 구조적 한쪽 끝을 비추어내는 것으로, 일본 사회에 퍼지는 “공기”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여기서는 고찰 대상 기간에서 생긴 한일관계에서 생긴 이슈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신년 회견, 문 대통령 삼일절 연설, 일본 정부가 실시한 반도체 재료 수출 엄격화, “화이트 국가”제외, 문 대통령 광복절 연설, GSOMIA 파기와 철회에 주목해서 일본 중앙지가 사설에서 어떻게 한일관계를 논의하고 금후의 방침이나 자세를 보였는지를 분석하고 여론 조사 결과에도 언급하는 것으로 일본 사회에서 존재하는 한국에 대한 분위기를 제시하려고 함.
- 또한, 중앙지 중, 아사히 신문이나 닛케이 신문, 그리고 특히 마이니치 신문에서 시민 교류를 호소하는 사설이 많이 게재되었음. 본고에서는 정치 이슈에 관련 사설 분석에 한정하기 때문에 시민 교류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았음. 신문에 게재된 일본 시민의 투고 기사나 전문가의 논평 등을 고찰해서 일본 사회의 공기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음.

1. “역사”와 “법”의 교착점에 위치한 징용공 문제: 2019년 1~3월

○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신년 기자회견

- 2019년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신년 기자회견 개최.
- 징용공문제를 포함한 한일관계에 대해 발언. 중앙 일간지는 모두 사설에서 다루어, 논평을 제시하였음.

① 요미우리 신문

- 사설 “징용공문제: 문씨는 판결을 핑계로 하지 마라 (徵用工問題: 文氏は

判決を言い訳にするな”(2019년 1월11일자)는, “국내 사법판단을 이유로, 국가간 약정에 따른 의무를 피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문 대통령이 “대일 외교를 안정화시키는 책임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비판.

- 구체책을 내놓지 않아 “남의 일과 같은 (문 대통령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
- 한국 정부가 판결 후 아무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협정을 바탕으로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해서 일본정부의 방침을 평가. “한국의 부당성을 국제사회로 호소하는 것”을 주장.

② 아사히 신문

- 사설 “징용공문제: 일한에서 극복할 노력을 (徴用工問題: 日韓で克服する努力を)” (2019년 1월11일자)은 “지금 우선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 (징용공) 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명확한 태도를 제시할 것”이라고 하며, “일한은 1965년 기본조약이나 청구권 협정을 초석으로 하여, 신뢰와 협력을 심화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문 대통령에게는 “어려운 판단일 것”이라고 동정을 표하면서도, “현안을 넘기기 위해서는, 여론의 노여움을 사서라도 종래 정부 견해를 답습하여, 외교문제를 꼬이게 하지 않는 책”을 조기에 내기를 호소.
- “제3국을 포함시킨 중재위나 국제재판으로 결착시키는 것이 역사문제와 같은 현안에 어울리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여, “어느 한쪽의 주장에 손이 들어져도 감정적 응어리가 남을지도”라고 지적함.

신년사에 대해 모든 중앙 일간지가 문 대통령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평가하지 않고 문제는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

③ 마이니치 신문

- 사설 “문 대통령의 징용공 발언: 정치 지도자가 해결을 (文大統領の徴用工発言: 政治のリーダーが解決を)” (2019년 1월11일자)은 “1965년 일한 기본조약과 이에 따른 청구권 협정을 양국관계의 기반으로 파악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며, 문 대통령의 자세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문 대통령이 정부간 협의에 응하는지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구체적인 해결책의 제시도 없고, 오히려 당면 상황을 지켜볼 생각을 표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
-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제소는 “양국 간 외교 해결의 실패”이며, 양국 간의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

④ 산케이 신문

- 주장 [사설'일 뜻] “문 대통령 연설 너무나 시뻘은 일본비판이다 (文大統領

- 演説 余りに勝手な日本批判だ)”(2019년 1월11일자)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일본에) 책임을 전가하였다”고 해 문 대통령은 문제를 되풀이하여, 미래지향을 막고 있으며, “현명”하지 않은 지도자는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
- 문 대통령이, 징용공문제가 “불행한 역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 인식 자체가 일한의 역사 사실에 반한다”고 비판.
 - “한국에게 비난의 소리를 내며 진지한 대응을 요구해가는 것”이 일본정부가 취해야 하는 자세라고 주장.
 - 주장 “문 대통령과 북조선 ‘제재 완화’ 경솔히 말하지 마라 (文大統領と北朝鮮「制裁緩和」軽率に語るな)”(2019년 1월14일자)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마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대변자인 것 처럼” 말한 것에 위구심을 느꼈다고 주장.
 -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하나도 구체화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현 단계에서 북한 제재 완화를 논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을 흔들리는 언동”을 삼가하도록 주장.

⑤ 닛케이 신문

- 사실 “일한 대립 영향을 기업활동으로 넓히지 마라 (日韓対立の影響を企業活動に広げるな)”(2019년 1월11일자)는, “경제계의 대응은 현 시점에서 냉정”하지만, 현장에서는 불안감도 강해지고 있음에 언급. 향후, 한국에서 대법원 판결에 유사한 판결이 이어지면, “일본 기업이 위축하여 사업에서의 철회나 투자 축소로 이어질 전개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 연설은 “일본과의 경제 관계에 대한 배려는 안 보였다”며, 일본기업의 불안을 억제되지 못 했다고 지적.
- “사법 판단과는 별도로, 문 정권의 결단으로 외교관계를 이끌어 주었으면 한다”고 하며, 한국정부는 일각이라도 빨리 대응책을 제시하여 한일 비즈니스로의 영향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

○ 문재인 대통령의 삼일절 연설

- 2019년 3월1일에 행해진 문 대통령에 의한 삼일절 연설에 관해, 아사히 신문 이외의 중앙 일간지는 모두 사설에서 다룸.

① 요미우리 신문

- 사실 “문제의 근저는 이상한 대일관이다”(問題の根底は異様な対日観だ)(2019년 3월2일자)는 한일 양국이 식민지 지배에 얽힌 문제 해결에 진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이러한 축적을 부정하고 식민지 지

**3·1절 연설에 대해 요미
우리와 산케이는 문대
통령의 대일 자세를 의
문시해서 평가하지 않
고 마이니치, 닛케이는
기본적으로 평가했음.
아사히는 당시 없음.**

배의 청산에 고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렇다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지적. 문 정권은 “관계 악화를 방치해놓고 일본에 협력을 호소해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

- 일본 정부는 “감정적 응수를 피하면서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에 대해 계속 의연하게 주장해 가야 한다”고 제언.

② 아사히 신문

- 아사히 신문은 삼일절 문 대통령 연설에 맞춘 사설을 게재하지 않았음. 약 한 달 전인 2월 9일에 2·8독립 선언 100주년에 맞춰 사설 “일한의 100년: 역사를 성실히 바라보며”(日韓の100年: 歴史を誠実に見つめて)를 게재했음.

③ 마이니치 신문

- 사설 “삼일운동부터 100년: 상호존중으로의 새로운 행보를 (3·1運動から100年: 相互尊重への新たな歩みを)”(2019년 3월2일자)은, 문 대통령의 연설이 역사문제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데에 그쳤으며, “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 문 대통령이 “관계 개선을 위한 의욕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
- 문 대통령이 “친일파 청산”을 내세우는 것은 민주적 국가 만들기를 위한 것이며,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서 마찰의 요인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구한 데 대해 “독립운동은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며,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해서 반일기운을 높히려는 의도는 없다는 것일 것”이라며 “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주장.

④ 산케이 신문

- 주장 “‘반일’로 나라를 통합하지 마라(「反日」で国をまとめるな)”(2019년 3월2일자)는 “힘을 모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했을 때야말로 한국과 일본은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된다”고 말한 데 대해 “직접적인 말로 인한 일본 비난은 피했지만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강경하다”며 그것은 “한국 측 주장에 일본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호는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고 비판.

⑤ 닛케이 신문

- 사설 “한국은 내셔널리즘 관리를 (韓国はナショナリズム管理を)”(2019년 3월 2일자)은 “친일 잔재 청산”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한 것, 그리고 한 일이 힘을 합쳐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할 때라고 말한 것이,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지도 모른다고 우려.

- 연설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생각”도 제시되었다며, 연설”대일 비판을 전체적으로 억제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

2. “역사”와 “법”에서 통상 문제로의 “전선” 확대: 2019년 4~7월

○ 반도체 재료 수출 엄격화

- 2019년 7월4일, 일본정부는 반도체 제조의 재료가 되는 3개 품목에 관해 한국으로의 수출 수속을 엄격화하는 조치를 발동.
- 동 조치에 대해 한국은 반발했으며, 한일관계는 더욱 긴장을 높이는 와중에, 모든 중앙 일간지가 번번이 대한 수출 엄격화를 사설에서 다루었다.

① 요미우리 신문

- 사설 “대한수출 엄격화: 문 정권의 일본 비판은 어긋나다 (對韓輸出嚴格化: 文政権の日本批判は筋違いだ)”(2019년 7월17일자)는, 한국 정부가 대한 수출 엄격화에 반발하여 일본 비난에 시종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세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한국이 자국의 수출관리 체제를 검증하고 재검토하는 것이 선결”이라고 주장.
- 한국정부에 의한 수출관리 체제가 무르다며 “불법 수출 전체가 늘고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느냐”고 지적. “일본이 EU와 보조를 맞추는 것만으로 한국이 일본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

② 아사히 신문

- 사설 “대한 수출규제: ‘보복’을 즉각 철회하라 (對韓輸出規制: 「報復」を即時撤回せよ)”(2019년 7월 3일자)는, 대한 수출 엄격화에 대해 “자유무역 원칙을 꺾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수출규제조치는 “사실상의 대항조치”라고 단정하고 “일본정부는 징용공 문제가 배경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라는 것과 같이 말하고 있”으나 “전혀 설득력이 있지 않다”고 비판.
- 수출규제는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하며 보복의 응수가 될 지도 모른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일한 양 정부는 머리를 식힐 때”이며 “외교 당국의 고위급 협의로 타개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

③ 마이니치 신문

- 사설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 통상국가의 이익을 훼손한다 (韓国への輸出規

반도체 재료 수출 엄격화에 대해 요미우리와 산케이는 당연한 조치로서 평가, 아사히와 마이니치는 비판, 즉시 철회를 주장. 닛케이는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

- 制 通商国家の利益を損ねる)”(2019년 7월 4일자)는 대한 수출의 엄격화가 “외교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무역절차를 거론하고 정치의 도구”로 만든 것이며 “일본이 증시해 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라고 비판.
- 대한 수출 엄격화에 대해 “전 징용공 배상을 일본 기업에 명령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한국에서 만족스러운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사실상의 대항 조치에 나섰다”고 분석. 한국에서 제시된 방안이 일본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은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인 수법에 호소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
 -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규칙에 따른 자유무역 추진이라는 이념에 어긋날 뿐 아니라 WTO 협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코멘트도 게재.

④ 산케이 신문

- 주장 “대한 수출의 엄격화 부당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의사다 (對韓輸出の嚴格化 不当許さぬ国家の意思だ)”(2019년 7월 2일자)는 문 정권이 징용공 소송과 위안부 문제, 자위대기로의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등, 집요하게 반일적 행동을 반복하고 있고, 항의를 거듭해도 “마이동풍을 터뜨리는 한국에 대해, 법에 따른 조치로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한 수출 엄격화를 평가, “국가 의사를 의연하게 보여주는 의미는 크다”고 지적.

⑤ 닛케이 신문

- 사설 “전 징용공을 둘러싼 대항조치의 응수를 자제하라 (元徴用工めぐり 対抗措置の応酬を自制せよ)”(2019년 7월 2일자)는 대한수출 엄격화에 대해 전 징용공 소송을 둘러싼 “한국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를 단행했다”며 “징용공 문제의 일의적인 책임은 한국 측에 있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 한편, 이러한 통상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기업으로의 영향 등 부작용이 커, 긴 안목을 볼 때 불이익이 많다”고 우려를 표시.
- 일본 정부에 의한 대한 수출 엄격화는 “국제정치의 도구로서 통상정책을 이용하려는 발상이 짙다”고 지적하며 자유무역을 말하는 자로서의 평가가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
- 한국이 대항 조치를 취하고 보복의 연쇄가 계속된다면 한일관계 전반에 긴장을 초래한다며 “곤란하더라도 대화로 해결하는 노력을 표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

○ “화이트 국가”제외

- 2019년 8월 2일, 일본정부는 우대조치의 대상국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

**화이트 국 제외에 대해
요미우리와 산케이는
일본정부의 조치를 이
해, 당연한 것으로 주장.
아사히와 마이니치는
즉시 철회를 주장. 닛케
이는 조치를 이해하면
서도 과도한 무역 제한
되지 않도록 일본정부
에 요구.**

- 국을 제외하는 것을 결정. 같은 달 28일부터 시행.
- 모든 중앙 일간지는 사설에서 다루었다.

① 요미우리 신문

- 사설 “수출우대국 제외: 한국은 왜 현실에 맞지 않는다(輸出優遇国除外: 韓国はなぜ現実に向き合わぬ)”(2019년 8월 3일자)는 “화이트국”에서 제외하는 것이 수출 제한과 달리 안보조치이며 WTO 규칙에서도 인정된다고 주장.
- 문 대통령이 “책임은 전면적으로 일본에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일본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사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한국이 우대국으로 재지정을 원한다면 자국수출관리 적정화가 선결”이라고 주장. 한국의 대응은 “감정적인 행동”이라고 지적.

② 아사히 신문

- 사설 “대립하는 한-교류 행보도 끊을 것인가(対立する日韓: 交流の歩みも壊すのか)”(2019년 8월 3일치)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보복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일련의 수출관리를 일본은 다시 생각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 문 대통령은 “사태가 꼬인 현실과 스스로의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상황 악화의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말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일방적인 책임전가라고 비판.

③ 마이니치 신문

- 사설 “한국을 ‘수출 우대’ 제외 부정적인 나선형을 피한다(韓国を「輸出優遇」除外 負のスパイラルを案じる)”(2019년 8월 3일자)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극히 이례적인 대응”이라며 “과거 마찰과는 차원의 다른 대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한국의 반일 감정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
- 한일 양 정부 모두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위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한일관계가 “여기까지 꼬인 것은 한국인 징용공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 일한 양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 한일 양 정부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양보하기가 필요하다고 주장.
- 냉전 종결 이후에도 동아시아 질서 유지에 이르는 한일 역할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고, 북한의 비핵화에는 한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며,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한일 공통의 이익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

④ 산케이 신문

- 주장 “‘화이트 국가 제외’, ‘어리석음’ 끊임없이 타당한 판단이다 한국은 불신불식 행동일키라(ホワイト国除外「甘え」絶つ妥当な判断だ 韓国は不信払拭の行動起こせ)”(2019년 8월 3일자)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에 대해 “타당한 판단”이라며 “한국의 반발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의 의지를 관철한 것으로 지지하고 싶다”고 평가.
- 종전 일본의 대한외교는 안보상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화이트 국가에서의 제외라는 “당연한 일조차 삼가해 왔다”며 “그것을 좋게도 문제인 정권은 반일적 행동을 거듭해왔다”. “이번 조치는 더 이상 한국의 일본에 대한 어리석음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한 점에서도 이번 결정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
- 한국은 일본 측의 뿌리 깊은 불신감을 직시해야 한다며 수출관리체제의 미비를 고치는 것은 물론 국가와 국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에 부합하는 나라로 행동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반응을 취하는 문정권에는 실망했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에게 좀 더 냉정해지라고 요구한다.

⑤ 닛케이 신문

- 사설 “한일은 마찰 대상을 넓히지 마라(日韓は摩擦対象を広げるな)”(2019년 8월 3일자)는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한 데 대해 “한국이 안보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는 없다”면서도 일본 정부도 “과도한 무역 제한은 엄하게 계명해 달라”며 자유무역 원칙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
- “양쪽 정치에서의 언행이 상대국의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며 감정적인 응수를 자제하고 안보협력과 민간교류를 뒷받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지적.
- 한국 정부는 징용공 문제에 대해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한일 양 정부는 스스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3 . 링크지되는 통상과 안보, 그리고 “과거”: 2019년 8월

○ 문 대통령에 의한 광복절 연설

- 2019년 8월 12일, 한국 정부는 안보상 수출관리에서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일본의 제외를 결정. 9월 18일부터 시행.
- 2019년 8월 15일 문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에서 한일관계를 언급.
- 모든 중앙일간지가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사설로 거론했다. 특히 산케이신문은 두 차례에 걸쳐 사설에서 언급.

광복절 연설에 대해 아사히, 마이니치, 닛케이는 대일 자세를 기본적으로 평가, 요미우리와 산케이는 일본에 관계 약화의 책임을 기착한 곳으로 이해, 비판.

① 요미우리 신문

- 사실 “한국 대통령 연설: 관계복구의 구체책이 보이지 않는다(韓国大統領演説：関係修復の具体策が見えぬ)”(2019년 8월 16일자)는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관계 악화의 원인이 일본에 있느냐 같은 연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비판.
- 한국 정부가 “우선 무역관리 체제를 재검토하고 일본과의 신뢰관계 회복에 힘쓰는 게 근본”이라며 문 대통령은 “대일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인 협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
- 문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주변국을 위협하는 독재국가와 협력해 통일을 실현하느냐는 의문을 표시하고, “문정권이 취해야 할 정책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심각하게 파악하고 위협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김정은 정권에 설파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

② 아사히 신문

- 사실 “일본과 한국을 생각한다: 차대로 넘기는 호혜관계 유지(日本と韓国を考へる：次代へ渡す互恵関係維持を)”(2019년 8월 17일자)은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역사문제의 톤을 낮추고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에 나서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잇겠다”며 관계 개선을 호소한 것을 평가. 연설을 계기로 “서로의 불이익밖에 없는 보복전에 중지부를 찍고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로 걸음을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
- 양국이 한국 병합의 합법성 위법성에 대해 옥충색으로 결착시킨 경위를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것은 이제야 병합을 불법으로 삼는다면 배상범위가 끝없이 넓어질 수 있다”며 일본 측의 사치품에 대해 설명.
- 문 대통령에게 “우선은 위안부 합의를 재평가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하며 행동하기를 호소.
-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한국을 튀겨내는 것만으로는 해결의 길은 열 수 없다”며 아베 정권이 과거 반성에 소극적이라고 보는 한국 측의 불신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새삼 한반도에 관한 역사인식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
- 한일 정상 간에서 “문정권에 있는 위안부 합의 재평가”와 “아베 정권의 인식을 발신하는 조치”를 동시에 논의할 것을 제안.

③ 마이니치 신문

- 사실 “문·한국 대통령의 연설 억제된 자세 유지(文·韓国大統領の演説抑制された姿勢の維持を)”(2019년 8월 16일자)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해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걸어나간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당부한 데 주목. “조금 전까지 강한 말로 비난하고 반일 감정

을 부추긴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억제된 돈이 꺾뚫어진 것은 적어도 평가하고 싶다"고 주장.

- 문 대통령은 도쿄 올림픽에 대해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다"라고 기대감을 표시한 데 대해 그러하다면 "일본이 내세우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이라는 이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주장. 한국 외교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문제에 대해 일본에 흔들여놓는 움직임을 엄두에 둔 지적. 문 대통령은 "계속 냉정한 대응에 노력하고 또 그것을 국민에게 당부해 달라"고 호소.

④ 산케이 신문

- 주장 "일한관계 개선공은 문 씨의 손에 있다(日韓關係の改善 ボールは文氏の手にある)"(2019년 8월 21일자)는 문 대통령이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면 우리는 흔쾌히 손을 잡는다"고 말한 데 대해 "역사 문제에서 자극적인 표현으로 인한 비판을 피한 것이 대일 배려인 것 같다"고 주장.
- 한국 내에서의 "아베 정권이 응할 차례다"(한국지 중앙일보 사설)라는 목소리를 소개한 뒤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해 "전후 최악이라는 지금의 한일관계를 초래한 것은 한국의 극단적인 반일적 정책, 행동"이며 문 대통령에게는 그 자각이나 반성이 없다고 비판.
- 문 대통령이 일본의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에 대해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겠다"고 비판한 데 대해 "수출관리 강화를 철회시키는 협상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분석. "우대조치를 다시 얻으려면 한국이 일본의 신뢰를 되찾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⑤ 닛케이 신문

- 사설 "일한은 지금이야말로 냉정한 대응을(日韓は今こそ冷静な対応を)"(2019년 8월 16일자)은 문 대통령이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향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잇는다"며 "전후일한이 모두 식민지 지배에 의한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려고 해왔다"고 말한 것에 주목. 문 대통령이 "일본이 전후 보상으로 일정한 노력을 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며 "일본을 도발하는 듯한 기존 발언과 비교해 대일 비판을 억제한 것은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
- 한편, "사태타개에 대한 구체책은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며 "징용공 판결을 받고 우선은 한국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일한관계 수복의 출발점"이라고 주장.

**GSOMIA 파기에 대해
모든 중앙지가 지역 안
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한국의 결정에 반
대 표명.**

○ GSOMIA 파기

- 2019년 8월 23일 한국 정부는 GSOMIA의 파기를 결정하고 발표.
- 모든 중앙일간지가 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 사설에서 거론했다.

① 요미우리 신문

- 사설 “한국의 협정 파기: 미일과의 안보협력을 훼손했다(韓國の協定破棄: 日米との安保協力を傷つけた)”(2019년 8월 24일자)는 한국의 GSOMIA 파기를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뒤흔드는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비판.
- 문 대통령이 “15일 연설에서 대화를 당부해도 일본 쪽은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갈등의 근간인 한국인 원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구체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해에 시달리는 주장”이라고 반론.
- 일본은 “협정 파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자위대와 미군과의 협력 강화와 역지력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의사소통을 끊임없이 중층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아시아의 안보환경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호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② 아사히 신문

- 사설 “일한정보협정: 대립확대의 연쇄를 끊어라(日韓情報協定: 対立拡大の連鎖を断て)”(2019년 8월 24일)는 GSOMIA의 파기를 결정한 데 대해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냉정한 사고를 헛다녔다”며 문 대통령은 “지금 한 번 숙고하고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
- GSOMIA 파기 배경에 문정권이 “협정 파기를 요구하는 대북 배려”가 있었을 가능성이나 “미국 스스로가 초래한 위신 저하가 있다”는 등 지적.
- “역사 문제에서 경제, 안보로 번지는 갈등의 연쇄를 끊어야 한다”면서도 “(일한) 보복전의 근본인 것은 징용공 문제이고, 이 현안을 조금씩이라도 진전시키지 않으면 관계 개선은 원치 않는다”고 주장. “양 정부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응책에 차분히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

③ 마이니치 신문

- 사설 “한국이 정보협정 파기대립의 고차원화를 우려한다(韓國が情報協定破棄 対立の高次元化を憂える)”(2019년 8월 23일자)는 GSOMIA의 파기에 대해 “일한 양국의 대립이 한층 고차원화돼 안보 분야에까지 미쳐버린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
- GSOMIA 파기 결정 배경에는 “일본에 대한 강경 자세를 국내에서 어필하는 노림수가 있다”고 분석.

- GSOMIA 파기에 따라 한일 갈등은 더욱 에스컬레이트될 수 있고 한미동맹에도 그림자를 떨어뜨리려 한 데 이어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의 일단은 아베 정권에도 있다”고 지적. 문 정부가 “징용공 문제나 위안부 문제로 불성실한 대응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외교 문제와 경제 정책을 엮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국 측의 강한 반발은 예상됐을 것”이라고 주장.
- 한일 갈등의 영향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스포츠, 인적 교류에까지 미치고 있어 “심각한 관계 악화를 개선으로 이끌어갈 책임은 양측에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성을 제기.

④ 산케이 신문

- 주장 “한국의 협정 파기 북한을 기쁘게 하는 우거다(韓國の協定破棄 北朝鮮を喜ばせる愚挙だ)”(2019년 8월 23일자)는 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 “일미, 미한동맹의 불안정화를 바라는 북한이나 중국을 기쁘게 하는 우거”라며 비판, “일본 정부가 문정권에 항의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
- “동북아 안보에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면 문정권은 번복하고 협정을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은 한반도 정세 불안정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호소.

⑤ 닛케이 신문

- 사설 “일한 군사협정 파기는 안보에 화근을 남긴다(日韓軍事協定破棄は安保に禍根を残す)”(2019년 8월 24일자)는 GSOMIA 파기에 대해 “동북아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냉정함이 결여된 판단이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GSOMIA 파기 결정은 한일이 분단돼 한미일의 안보협력에 탄력을 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이익을 얻게 된다고 지적. 한국 정부는 “지역 정세를 냉정하게 분석해 협정의 의의를 재인식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면서 일본 정부도 “일한관계 개선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

4. 징용공 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통상 문제로의 대처: 2019년 9월~11월

○ GSOMIA 파기 철회

- 2019년 11월 22일 한국 정부에 의한 GSOMIA 파기 방침 철회 발표

GSOMIA 파기 철회에 대해 모든 중앙지가 파기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징용공 문제 해결이 한일 관계 개선하기 위해 부가결로 주장.

- 중앙일간지는 모두 GSOMIA 파기철회를 위해 사설을 게재했으나 GSOMIA 실효를 앞두고도 각지 사설을 통해 한국에 파기철회를 당부했던 점은 특징적.

① 요미우리 신문

- 사설 “GSOMIA 일미한 안보협력의 시금석이다(GSOMIA「日米韓」安保協力の試金石だ)”(2019년 11월 16일)는 한국에 대해 “북한의 군사도발 억지를 위해 한미일 연계를 유지할 결의가 있느냐”고 물음.
- 한국 측이 GSOMIA의 계속에는 일본 측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무너뜨리지 않는 데 대해 “실효에 이르면 한국은 미국의 신뢰를 잃고 한미동맹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을 인식하지 않느냐”고 비판.
- 한국 측이 GSOMIA 파기 이유로 일본에 의한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를 꼽고 있지만 “일본의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미비하기 때문”이며 수출규제 강화와 GSOMIA를 연결되는 것은 도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파기 취소를 자장.
- 사설 “GSOMIA: 한국의 파기 재검토는 당연하다(GSOMIA : 韓国の破棄見直しは当然だ)”(2019년 11월 23일치)는 “일미한3국의 방위협력이 상치받는 사태는 일단 회피됐다”면서도 한일 간 현안 해결은 앞으로 이어져 대화를 거듭하고 신뢰관계 회복에 이르기까지 낙관할 수 없다고 지적.
- GSOMIA 파기 철회 배경에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강한 압력이 효과적이었다고 분석.
- 한국 정부는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고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에 관한 정책대화에 응하는 것에 대해 한국의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한 관계 호전은 한국인 원 징용공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 여전히 “문재인 정권은 실효성 있는 선후책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

② 아사히 신문

- 사설 “한일정보협정: 문정권은 파기 철회를(日韓情報協定 : 文政権は破棄の撤回を)”(2019년 11월 16일자)은 문정권에 대해 GSOMIA 파기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 GSOMIA 유지가 국익에 이르는 것은 문 정권도 알고 있을 것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
- “일본 정부도 근사한 태도를 완화하는 필요가 있다”고 지적. “고위급 인사의 대화 틀을 마련하는 등 다가서는 제스처를 내림으로써 일단 협정의 지속을 도모하지 않겠느냐”고 제언.
- 사설 “한일정보협정: 관계개선의 계기로 해라(日韓情報協定 : 関係改善の

- 契機とせよ)(2019년 11월 23일자)는 문정권이 GSOMIA의 파기 철회를 발표한 데 “일단 안도”라며 “문제의 근본은 손대지 않고”라며 “이치불사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건전한 관계 회복에 본질을 뒤야 한다”고 주장.
-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사실상의 보복”이라며 “일본 정부에도 관계 개선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주장. “문 정권이 잘못된 대항조치의 에스컬레이트를 밟은 이상 일본 정부도 이성적 사고로 돌아와야 한다며 수출규제를 둘러싼 협의를 진정으로 진행해 강화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 한일 양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지키고 양국 관계 전반을 본연의 궤도로 되돌려놓는 발을 내딛어 달라”고 호소.

③ 마이니치 신문

- 사설 “일한 군사정보협정 실효시키지 않은 노력 끝까지(日韓の軍事情報協定失効させぬ努力最後まで)”(2019년 11월 19일자)는 이대로 실효시켜서는 손실이 크다며 GSOMIA 유지를 강력히 호소.
- 한국이 GSOMIA를 파기하면 북한에 대해 “일미한의 발길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돼 3국 연계를 약화시키고 싶은 중국을 이롭게 될 것”이라고 지적.
- “실효가 되면 다시 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협정 유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
- 사설 “일한 정보협정 유지 최악의 사태는 회피됐다(日韓情報協定の維持最悪の事態は回避された)”(2019년 11월 23일자)는 GSOMIA의 실효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판에서 회피됐다”며 “일한 안보협력의 틀이 일단 유지된 것”에 대한 안도감을 보여준다.
- 한국 정부가 GSOMIA의 실효 회피와 함께 WTO 제소 중단도 결정한 데 대해 “일한 간에 어디까지 접어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한일 양국이 “합의에 이른 것은 양국 모두 미국에 얽힌 측면이 크다”고 지적.
- GSOMIA 실효 회피가 민간 교류가 가늘어지면서 양측의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곧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유보. 이를 계기로 ‘조금씩 신뢰 회복을 향한 행보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주장.

④ 산케이 신문

- 주장 “군사정보협정한국은 부당한 파기 철회를(軍事情報協定 韓国は不当な破棄撤回を)”(2019년 11월 16일자) GSOMIA에 대해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와 얽히는 것은 도리가 통하지 않는다며 “전제조건 없이 GSOMIA 유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
- GSOMIA는 “일미, 미한이라는 두 동맹을 연결해 왔다”며 “그것을 파기하면 지역 위협인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에 대해 얽혀온 일미한 협력이 후퇴

해 버린다”고 주장. GSOMIA 파기는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유사에 대한 미국의 즉시 태용 태세제에 큰 차질이 빚어지”며 “지역에서 미국을 쫓아내고 싶은 중국은 기쁘며 미한 동맹을 소멸시키기 위해 한국에 경연양양의 일감을 강화할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

- 주장 “GSOMIA 연장한미일 협력을 다시 세워라(GSOMIA延長 日米韓の協力を立て直せ)”(2019년 11월 23일자)는 GSOMIA 실효를 회피하는 동시에 WTO 제소 절차 중단, 한일 양 정부 직접 대화 실시를 결정한 데 대해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의 방침 변경에 일정한 평가를 한 것”에 언급. 문 정권이 “GSOMIA 파기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직전에 그만둔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
- 문정권의 “GSOMIA 파기 움직임이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관계나 한미 동맹을 크게 해친 것은 확실하다”며 “일미한의 실효적인 안보협력과 한미 동맹 재건이 시급하다”고 주장. 이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 자신이 자국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확보하기 보다 감정적인 반일로 달려왔다는 잘못된 자세를 깊이 반성하고 일본과 미국과의 진정한 협조노선으로 돌아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

⑤ 닷케이 신문

- 사설 “협정 유지를 계기로 한미일 체제를 다시 세우라(協定維持を機に日米韓体制を立て直せ)”(2019년 11월 23일자)는 한국 정부가 GSOMIA 파기 방침을 수정한 데 대해 “대국적 견지에 선 판단을 환영”하고 WTO 제소 절차 중단과 수출관리 실무자회의 개최 결정도 “조건부로 접어든 것은 전진”이라고 평가.
- 한일관계 악화는 폭넓은 분야에 미치고 있다며 GSOMIA 파기 철회를 한 일관계 수복하는 실마리로 삼아야 한다. 한국 측은 최대 현안인 원 징용공 문제로 타개책을 제시하며 수출체제 미비를 시정하고 일본 측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주장.
- 일본 정부도 “한국과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납치 문제도 안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이웃집의 한국을 잇고 한미일 체제를 다시 세우는 때”라고 호소.

나가며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모든 중앙 일간지가 문 대통령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해 평가하지 않음. 한

국 측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주장. 산케이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안보관도 비판하는 대상.

- 문 대통령의 3·1절 연설: 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연설 내용은 설득력 부족으로 평가하지 않음. 아사히는 연설에 닿지 않고 마이니치는 연설을 평가하고 한국의 독립 운동에 이해를 제시하며 역사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한일 지도자가 발신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 산케이는 연설 내용에 대해 한국의 주장에 일본이 따라야 우호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평가하지 않음. 닛케이는 연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평가하지만 역사를 둘러싸고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고양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
- 반도체 재료의 수출 엄격화: 요미우리와 산케이는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 닛케이는 조치에 일정한 이해를 표시하지만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 아사히와 마이니치는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 아사히, 마이니치, 닛케이는 수출 엄격화가 징용공 문제에서 “사실상의 대항 조치”라고 지적.
- 화이트 국 '제외':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안보 우려에서 취한 조치이며 한국은 수출 관리의 적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 아사히는 조치의 철회를 주장 외교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호소. 마이니치는 직접 조치 철회에 언급했지만 이 조치가 한국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외교적 해결을 추구. 산케이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하고 문 대통령에게 더 냉정하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 닛케이는 안보상의 우려의 조치로 이해하지만 과도한 무역 제한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한일 양국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
- 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 중앙 일간지의 사설은 모든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호소한 발언에 주목. 아사히, 마이니치, 닛케이는 대일 비판을 억제한 점에서 연설 내용을 기본으로 평가. 한편 요미우리와 산케이는 일본 관계 악화의 원인이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평가하지 않음.
- 중앙지 사설 경향과 비슷하고 일본 여론에서도 대한 수출 관리 강화를 지지하는 일본인이 대다수. 닛케이 여론 조사 (2019년 9월1일자) 결과에 따르면 수출 관리 강화지지는 67%, 지지하지 않음이 19%이며 지난 7월 같은 조사 시 보다 9% 증가했음. 마이니치 신문 여론 조사 (2019년 9월 16일자) 결과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음. 이 조사는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64%가 지지, 21%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음. 반면, 이 여론 조사는 문제 해결하기에 향해 일본 정부는 대화를 통

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57%이고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사람은 29%이었음. 중앙지 사설중 다수파의 논조 반영하고 있음.

- GSOMIA 파기: 모든 중앙 일간지는 지역 안보 체제를 위협한다는 관점에서 한국이 GSOMIA 파기를 결정한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 GSOMIA 파기 철회: 모든 중앙 일간지가 한국의 GSOMIA 파기 철회를 환영. 요미우리, 마이니치, 산케이 닛케이의 한일의 신뢰 관계가 회복하거나 낙관하지 못하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회복을 위해서는 징용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입장. 특히 요미우리, 산케이, 닛케이는 한국 측이 징용공 문제 해결 방안을 나타내는 필요성을 주장. 아사히는 GSOMIA 파기 철회를 계기로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징용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2019년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에 걸쳐 실시된 한일접촉을 통해 악화된 한일관계의 국면 변화. 중앙지 논저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줌. 외교적인 분위기 변화에 비교해 일본 사회에서의 대한 감정은 악화된 상태가 계속됨.

- 2019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한일관계를 보면 2019년 10월하순부터 11월 상순에 걸쳐 실시된 한일 정상 수준에서 실시된 한일 접촉, 다시 말하면 아베 총리와 이낙연 총리 회담 (10월24일), 11월3일, 문희상 국회 의장 일본 방문과 그 때 수교된 문재인 대통령의 아베 총리 앞 친서, 그리고 11월 4일에 방콕에서의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가 악화된 한일관계에 변함이 보이는 계기가 되었음. 모두 중앙지가 연속된 한일 접촉에 언급, 산케이 신문 이외 긍정적으로 평가. 또, 모두 중앙지가 악화된 한일관계에서의 근본적 문제는 징용공 문제이며 대화로 해결하기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 특히 닛케이 신문은 서로 양보하는 중요성에 대해 직접 언급.
- 외교적인 분위기가 변하기를 보여주었던 반면. 일본 사회에서는 아직도 한국에 대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됨. 닛케이 여론 조사 (2019년 11월24일자)는 69%가 “일본이 양보하는 정도라면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대답했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보하기도 할 수 없다”고 답한 사람은 21%이었다. 이 조사 결과는 지난 10월에 실시한 결과와 변함이 없었음.

한일관계는 징용공 문제를 통상, 안보 문제에서 분리하고 역사화 법 모든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일 정부와 국민 모두가 모색하고 실행하기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모든 중앙 일간지가 징용공 문제를 한일간의 ‘역사’에 어떻게 마주 할 것인가에 대해 ‘온도차’가 있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한다는 전제가 일본 사회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토양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음. 요미우리 신문과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2019년 6월10일자)에 따르면 징용공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으로 해결되었고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78%가 납득할 수 있다고 대답했음. 이러한 여론은 이제도 변화가 없다고 보임. 징용공 문제는 통상 문제와 안보 문제에서 명확하게 분리하고 ‘역사’와 ‘법’ 모두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 저자 약력

■ 고바야시 소메이(小林 聡明)

니혼 대학(日本大学) 법학부 신문학과 부교수(准教授). 일본 히토츠마시대학(一橋大学) 사회학부 사회학 학사, 석사, 박사. 일본학술진흥회(JSPS) 특별연구원, 동경대, 메릴랜드대, 서울대, 고려대, 동서센터(East-West Center in Washington), 케임브리지대, 경희대 등에서 연구, 교육 활동. 한반도 지역연구, 동아시아 국제정치사/미디어사를 전공. 일본어로 된 주요 연구로서 단독저서『在日朝鮮人のメディア空間』(2007), 공동저서『メディアと文化の日韓関係』(2016) 외 기타 논문 다수. 한국어로 된 연구로서 공저서 “열전 속 냉전, 냉전 속 열전” (2018) 외 기타 논문 다수

기획 및 감수: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한유진(제주평화연구원 연구조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